

중소기업

온라인쇼핑 중에서는 음·식료품(34.2%), 생활·자동차용품(32.4%), 여행 및 예약서비스(18.9%)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적(-10.1%), 사무·문구(-2.2)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감소했다.

2015년 소매 판매액은 366조5천180억원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소매 판매액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업태별로 보면 전문소매점(-0.4%), 백화점(-0.4%)에서는 감소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무점포소매(9.4%)와 편의점(29.6%), 대형마트(2.4%), 슈퍼마켓(2.4%) 등은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반으로 온라인 환경이 변화하며 온라인시장은 더 확대되는 추세다.

개인과 소규모 상품공급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계형 인터넷몰인 오픈마켓이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인 소셜 커머스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 면세점

면세점 시장 역시 메르스의 여파로 타격을 받았다.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은 늘었지만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주춤하면서 가파른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2015년 면세점 총 매출액은 9조1천984억원으로 전년 8조3천77억원보다 10.72% 증가했다.

메르스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4년에 비하면 성장세가 꺾였다. 2014년 면세점 매출은 전년보다 21.59% 성장했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10년 4조5천19억원, 2011년 5조3천76억원, 2012년 6조3천292억원, 2013년 6조8천326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달러 기준 매출은 더 부진하다. 환율을 고려한 실제 매출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2015년 면세점 전체 매출액은 81억4천260억 달러로 2014년 79억320만 달러보다 3.03%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외국인 매출은 54억5천140만 달러에서 54억1천690만 달러로 0.63%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내국인 매출은 24억5천180만 달러에서 27억2천570만 달러로 11.17% 늘었다. 외국인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면세점협회가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면세점 전체 이용객은 3천432만 명에서 4천67만 명으로 18.49% 증가했다. 외국인 이용객은 1천576만 명에서 1천608만 명으로 2.00% 늘었고 내국인은 1천856만 명에서 2천459만 명으로 32.49% 증가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를 고려해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 신설하기로 하면서 치열한 '면세점 대전'이 펼쳐졌다.

그 결과 HDC신라면세점의 용산 신라아아파크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의 여의도 갤러리아면세점63이 문을 열었다.

2차 '면세점 대전'에서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재허가에 실패하고 두산과 신세계가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됐다.

■ 중소기업, 한국경제 성장동력으로 부상

2015년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됐다.

실제로 2015년 한국은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 달러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5년 수출액은 5천272억 달러로 2014년보다 7.9% 줄었고, 수입도 4천368억 달러로 16.9%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심해진다든가 계속된 유가 하락 때문에 교역이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904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개편하면서 고용지표와 수출지표를 반영해 지원 기업을 선정하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나섰다.

5조2천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로 정하고 고용지표 반영 사업을 2015년의 29.4%, 수출지표 반영 사업을 23.3%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규직 비율과 대기업 대비 임금수준,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고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제품·기술·가격 수준을 감안해 수출잠재력도 평가한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2.5% 수준인 수출기업 비율을 끌어올리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을 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진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 등에 힘입어 2016년 한국의 수출액이 5천382억 달러로 2015년보다 2.1% 늘어나고 수입은 4천482억 달러로 2.6%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신설법인 약 9만4천곳...2000년 이후 최다

2015년 새로 설립된 법인이 9만3천768개로 2014년(8만4천697개)보다 10.7%(9천71개) 늘어나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다 기록을 세웠다.

연간 신설법인 수는 2000년 약 6만1천개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04년 약 4만8천개까지 하락했다가 2008년(약 5만1천개)부터는 매년 늘었다.

2015년 신설법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만247개) 비중이 21.6%로 가장 컸고 제조업(2천155개, 21.5%)과 건설업(9천742개, 10.4%)이 뒤를 이었다.

2014년과 비교해 법인 설립 증가규모가 큰 업종은 부동산임대업(2천288개)과 도소매업(2천148개)이었다.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40대(3만5천699개, 38.1%)와 50대(2만4천469개, 26.1%)가 설립한 법인이 많았고 30대 대표가 설립한 법인(2만418개, 21.8%)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업종별로 보면 30세 미만과 30대는 영상정보서비스업(530개·2천131개)을, 50대와 6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3천89개·1천158개) 법인을 많이 설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의 신설법인이 늘어난 가운데 전체 신설법인에서 수도권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해 사이 소폭 감소(61.2%→60.9%)했다.

여성 대표가 세운 법인은 2만2천229개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사이 소폭 상승(23.3%→23.7%)했다.

■ 벤처투자액 2조1천억원으로 최고기록

2015년 벤처투자액이 2조858억원으로 2014년(1조6천393억원) 대비 27.2% 증가했다. '벤처 붐'이 불었던 2000년(2조211억원) 당시 기록을 뛰어넘어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업체 수도 1천45곳으로 2014년(901곳) 대비 16.0% 늘었고, 벤처펀드 결성액 역시 2조6천260억원으로 한 해 사이 1.6% 증가하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5년 벤처투자 현황을 업력별로 살펴보면 창업 초기기업인 3년 이내 기업과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각각 6천472억원(31.1%)과 5천828억원(27.9%)으로 전년 대비 1천400억원 이상씩 늘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한 투자비중은 2014년 55.6%에서 2015년 59.0%로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소프트웨어·모바일·IT 등)과 제조업(전기·기계·장비 등), 서비스업(도소매·전자상거래·교육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2014년보다 늘어난 반면 문화콘텐츠(영화·콘텐츠·게임 등) 부분의 투자 비중은 감소했다.

회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벤처캐피탈이 투자자산을 매각해 거둬들인 금액은 1조219억원으로 2014년(7천821억원)보다 30.7% 늘었다.

운용을 끝내고 해산한 25개 조합의 연평균 수익률은 7.48%로 2013년(8.73%)보다는 낮지만 2014년(7.00)보다는 다소 높아졌다.

자금을 회수한 방법으로는 기업공개(PO) 비중이 27.2%(2천784억원)로 2014년(1천411억원) 대비 9.2%포인트 높아졌지만 인수·합병(M&A) 비중은 1.5%(150억원)로 0.6%포인트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2014~15년 벤처캐피탈협회 재원이 늘어 투자 여력이 생긴 점, 핀테크나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사업 분야가 생긴 점, 최근 3년간 조합 수익률이 좋았던 점 등이 투자 확대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회수된 재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면 2016년에도 벤처 투자액이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소기업 기준 33년 만에 개편

소기업(小企業)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기업 판단 기준이 바뀌는 것은 1982년 이후 33년 만이다.

기존의 소기업 기준은 업종을 제조업, 도·소매업 등 18개로

크게 분류(대분류)해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0명 미만인 업체를 소기업으로 봤다.

예를 들면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8개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소기업이었고,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 10개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무조건 소기업으로 분류했었다.

하지만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조업을 다시 15개로 쪼개는 등 업종을 41개로 세분화해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 특성에 따라 57가지(120억·80억·50억·30억·10억원)로 나뉜다.

예를 들면 같은 제조업이라도 식료품 제조업이나 가죽·가방·신발 제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야 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이나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은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기청은 이번 소기업 기준 개편으로 중기업과 소기업의 경계에 있는 업체들이 소기업으로 남아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2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기업 1천976개 가운데 근로자가 줄어 중기업에서 소기업이 된 업체는 315개(16%)에 달한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10명 또는 50명으로 2개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고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도 개편의 이유다.

정부는 다만 이번 개정안 때문에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되는 업체는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해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 후 소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의 78.6%로 현재(78.2%)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2016년부터 적용된다.

■ '중기대통령' 중소기업중앙회장 교체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 2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박성택(58)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16년 1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박 신임 회장은 중기중앙회 정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527명 중 498명이 투표(투표율 94.5%)한 결선투표에서 294표(득표율 59.0%)를 얻어 당선됐다.

박 회장과 함께 결선 투표에 나선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4표(41.0%)를 받았다.

앞서 열린 1차 투표에서 박 신임 회장은 투표자 518명 중 154표(29.7%)를 얻었고, 이 이사장은 130표(25.1%),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12표(21.6%)를 얻었다.

중기중앙회는 첫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득표자끼리 결선 투표를 치른다.

박 신임 회장은 제25대 회장으로 4년간 중기중앙회를 이끌 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안성 출신인 박 신임 회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LG그룹에 입사해 근무하다 1990년 전자재와 골재 유통사인 산하물산을 설립했다.

이후 사업을 확장해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사인 산하, 컨테이너 물품을 보관하고 골재를 생산하는 위업개발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위업인베스트먼트 등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을 위한 조합 공동구매·물류회사 구축 ▲지역별 공동비즈니스 오피스센터 마련 ▲동반성장위원회를 대체할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경쟁력 우위업종 지정 ▲단체수익계약제도를 보완한 단체인증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 간의 비방은 물론 선거 직전 벌어진 금품 살포 등과 관련해 박 회장을 비롯한 일부 중소기업 관계자가 검찰에 기소되는 등 잡음이 일었다.

박 회장은 조합 임원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박 회장이 불법선거 혐의의 근거가 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박 회장에 대한 재판은 연기됐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정·관계로 확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전(前) 경제부총리 등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중진공이 신입 직원 4명을 부정 채용했다며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과 직원 1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와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이들을 합격시킨 뒤 면접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4명을 부정 채용하게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식으로 합격한 4명 가운데 1명은 행정직 4천71등이었지만 점수 조작으로 120등까지 등수가 뛰어올랐고, 또 다른 1명은 화공·환경 분야 258등이었지만 역시 점수 조작으로 11등이 돼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다만 검찰은 전직 인턴직원의 채용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조사를

벌이고 무혐의 처리했다.

최 부총리는 서면조사에서 '당시는 원내총무를 맡고 있어서 많은 이들을 만났으나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용 청탁을 한 다른 전직 고위 공무원 등도 채용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이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부정 채용에 관여한 중진공 인사팀장 등 실무자들 역시 중진공 내부에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채용 청탁을 한 이들로 기획재정부와 보훈처는 물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철규 전 이사장의 후임인 임채운 이사장은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며 1차 서류전형과 2차인 적성검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등 채용시스템을 바꿨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재계동향

■ 개요

한국경제는 4%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대하면서 2015년을 시작했지만 3년 만에 가장 낮은 2.6%에 그치며 한해를 마무리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의 여파가 있는데다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재계는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 한해를 보내다시피 했다.

주요 그룹의 구조조정도 잇따랐다. 2014년에 방산·화학부문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넘겼던 삼성그룹은 2015년 10월 나머지 화학계열사를 롯데그룹에 매각하는 '제2의 빅딜'을 단행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 통합 삼성물산을 출범시켰다.

이런 외중에 롯데그룹은 형제 간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고, 사면복권으로 출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일간지를 통해 복잡한 가정사에 대한 심경고백을 담은 편지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박삼구 회장은 유동성 위기로 채권단에 넘어간 금호산업을 6년 만에 되찾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재건했다.

연말에 주요 그룹이 단행한 정기인사에서는 오너가의 3~4세가 승진 등을 하며 약진했다.

■ 삼성발 자율 빅딜··재계 판도변화

삼성그룹은 2014년 말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을 비롯해 방산·화학부문 4개 계열사를 1조9천여억원에 한화그룹으로 매각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성사된 대기업 간 빅딜이었다. 순수 민간 주도의 대단위 기업 매각 작업으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삼성은 불과 1년도 채 지나기 전인 2015년 10월 말 삼성SDI 케미칼 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등 나머지 화학 계열사를 롯데그룹에 매각하는 '제2의 빅딜'을 전격 단행했다.